

納入金の 現實化와 自律化

金 東 建

(서울大 行政大學院)

우리나라의 教育財政이 빈약하다는 사실은 건국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어 온 문제이다. 특히 私學의 財政은 國·公立에 비해 더욱 불리한 상태에 놓여 왔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私立大學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國庫라든가 財團法人으로부터의 負擔이 별로 증가되지 못하므로 學生 負擔에 계속 크게 의존하여 왔다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教育財政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1985년의 私立大學 총 세입 가운데서 學生 負擔 몫이 82.3%에 달하고 있음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私學의 재정 운영을 학생 부담의 納入金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가까운 臺灣 같은 나라에서는 私立大學의 납입금 의존도가 80%를 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도 85%가 되고 있다. 日本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私立大學의 納入金 비중이 1984년에 42.3%였고 그 비중도 점차 감소해 가는 추세에 있다. 한편 印度에서는 私立의 學生 納入金 비중이 12%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이 나라가 英國式 고등교육 체제를 갖고 있고 따라서 私立의 개념이 다른 나라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아 물론 私學 財政이 학생 부담의 納入金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재정 운영을 학생 부담에 과도하게 맡긴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이 자체가 커다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私學의 재정난을 타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선 私學의 財政 規模가 증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財團法人의 부담 몫이 크게 확대되어야 하며 國庫 지원도 지금의 수준보다 대폭 증대되어야 한다. 한편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온 寄附金の 증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入學 寄附金制度도 신중한 절차를 거쳐 도입하고 이를 공명정대하게 운영함으로써 財源 調達の 획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늘어나는 재정 규모 속에서 納入金에 의한 학생 부담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도록 재정 구조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財政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와 병행하여 학생 부담의 納入金制度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난해에 教育改革審議會가 주최한 教育財源의 확보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현재의 大學 納入金

제도가 전공 계열을 무시하고 등록 학점 단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그 수준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고 受益者負擔原則에도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納入金 수준 자체도 그간의 經濟 成長 및 생활 여건의 향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上向 조정할 필요가 있고 敎育의 質的 向上을 위해 이를 現實化시켜야 된다는 견해가 敎育 재정 전문가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 大學의 納入金 수준이 높으나 혹은 낮으나 하는 문제는 이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따져 보느냐에 따라 각기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外國과 비교할 경우에도 美國의 一流 私立大學의 등록금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높고 國·公立大學을 포함한 美國 전체 대학의 평균 등록금 수준도 우리의 3 배 이상으로 높다. 그러나 學生當 納入金의 비중을 1인당 GNP에 대한 비율로 비교하여 볼 때 우리가 아직도 美國보다 2 배 이상의 높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大學의 納入金 수준은 도리어 낮아져야 되고 그대신 國庫나 財團 및 社會의 출연이 높아져야 된다는 결론이지만 실제 私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敎育投資의 필요량에 비해 法人 收入에는 한계가 있으니 심각한 고민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간 大學 敎育行政이 워낙 官 주도로 운영되어 왔고 大學이 가져야 할 自律性이 극히 제한되어 왔음은 부인할 길이 없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納入金의 결정은 정부가 지시하는 일률적인 지침에 그대로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納入金을 인상할 때마다 그 引上 要因을 명확히 규명하거나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社會의 각 分野에서 民主化로의 욕구가 팽배해 있고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도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때인 만큼, 敎育分野에서도 이러한 대세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곧 大學의 自律性을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大學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納入金 결정도 당연히 自律化해야 할 것이며, 각 大學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現實化시킬 것은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納入金を 현실화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나 사회·문화적 발전에 주역이 될 高級人力을 배출한다는 敎育투자적 입장에서 현재의 낙후된 私立大學 敎育의 質的 向上을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納入金 결정이 自律이라는 이름하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엄격한 합理性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國家와 社會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두 모색하고 난 후에 그래도 발생하는 부족분을 메우는 方向에서 納入金 수준이 결정되어야 하며 敎育의 質 向上과 연계시켜 學生이 부담한 경비는 學生에게 직접 혜택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원칙에서 納入金의 내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施設費와 같은 資本的 經費를 학생들의 納入金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敎育이라는 公共財를 제공한다는 大學의 기본적인 설립 목표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學生 納入金의 現實化는 완벽한 敎育 계획 아래에서 각종의 요소를 함께 생각하며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전공 계열별 敎育비 차이를 분석하여 각 전공별로 納入金을 차등화 시킨다든가 등록 학점 수에 따라 學生 負擔金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 등등은 모두 선진화된 제도임에 틀림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大學의 실질 경비 징수가 가능해지고 學生들의 입장에서 부담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算術的인 등식의 의미로서만 大學 財政을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敎育의 기회 균등이라든가 國民經濟에 끼치는 영향, 學父母들의 실질 부담 등도 함께 고려하면서 納入金의 引上을 최대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서 納入金의 現實化와 自律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